



# 건강보험, 서울대병원, 부산지하철 등 공공 노동자 파업 정당하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경북대병원분회, 부산지하철노조 노동자들이 10월 11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 노동자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이 10월 11일~17일 지역본부별로 돌아가며 파업을 별일 예정이다. 파업의 주요 요구는 직무성과급제 저지, 임금 대폭 인상, 의료 영리화 반대다.

건보공단 사측은 '정부 정책이라서 어쩔 수 없다'며 직무성과급제를 추진하고 있다.

직무급제는 연공급제(근속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무너뜨려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사측은 여기에 성과급제까지 보태려 한다. 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단결을 저해해 임금 인상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사측은 올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금을 1.7퍼센트 이상 올려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높은 물가 인상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상당 폭 감소되는 것이다. 그동안 줄곧 임금 인상이 억제돼 온 것을 고려하면 임금은 노조의 요구인 약 11퍼센트 이상 대폭 인상돼야 마땅하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올해 건보공단에 지급해야 할 정부 지원금을 9월 말 현재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연말에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보아 국고 지원을 최소로 줄이려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향후 보험료 인상과 보험 적용 범위 축소의 명분으로 악용될 것이다.



### 부자 감세

건보노조는 “의료 민영화 반대”도 파업 요구로 내걸었다.

윤석열 정부는 정작 꼭 필요한 공공의료 확대에는 인색한 반면, 공공의료(약간진료, 왕진, 병원 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공간 확보 등) 부족으로 생기는 환자들의 불편을 ‘비대면 진료’ 확대로 때우려 한다.

코로나19 동안 난립한 민간 영리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 진료 중개를 통

해 수익을 올리려 한다. 이 업체들이 이윤을 추구함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 오남용이 늘고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 지출과 본인 부담금도 늘어날 수 있다.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잘못 알려진 ‘개인의료정보 전자 전송

법’도 민영보험사들의 숙원 사업으로 그들의 수익 증대를 위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민영보험사들은 보험 청구를 간소화한다는 명분으로 환자를 거치지 않고 병원에 직접 환자의 건강·진료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는 민영보험사들이 정부에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거나 환자들의 보험 가입, 보험료 지급을 거절할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환자들은 사소한 편리를 얻는 대신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더 빠빠해진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민영보험사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 국민의 건강·진료 정보 빅데이터를 손에 넣으려 한다.

이런 정책들은 모두 의료 서비스에 대한 민간보험사들의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건강보험제도의 공적 통제력은 약화시킬 공산이 크다. 이는 건보공단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직무성과급제와 의료 영리화에 맞서는 건보노조의 파업에 지지를 보내자.

### 〈노동자연대〉 정규호에는

미국의 정치 위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파시즘으로 불장난 하는 서구의 우익, 1918~1923년 독일 혁명 등 유익하고 따끈따끈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 서울대·경북대 병원 노동자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말로만 “영웅”이라고 치켜세웠을 뿐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은 나 몰라라 해 왔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 인력과 예산을 줄여짜라고 다그치고 있다.

공공기관의 인력과 예산 통제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지난 2년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제외하고) 국립대병원 인력을 동결했다.

의료 인력 부족으로 환자들은 제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노동자들은 제비뽑기로 휴가를 써야 할 정도로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잘 알면서도 병원 사측은 환자·노동자들의 필요보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우선시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신음하고 골병들고 있는데 병원은 기재부의 통제를 평계로 인력 충원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홍소희 서울대병원분회 교섭단장)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정부가 공공부문 인건비를 통제하며 임금 인상을 얹누르는 것에도 불만이 상당하다.

올해 국립대병원의 임금 인상률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묶여 고작 1.7퍼센트인데,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5.1퍼센트)을 고려하면 임금 삭감이다.

인력 부족과 임금 인상 억제 등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입사 2년 내에 간호사 사직률은 59퍼센트에 이른다. 숙련 인력의 유출은 의료서비스를 악화시킨다.

### 제비뽑기

심지어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에 임금 억제와 노동자



간 경쟁을 강화시키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압박하고 있다.

부서간·직종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병원에 직무성과급제가 도입되면 직원 간 경쟁과 갈등이 부추겨지고, 전체 노동자 임금은 하향 평준화 될 것이고, 병원은 돈벌이로 내몰릴 것이라고 노동자들은 우려한다.

이에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은 인력 확충, 실질임금 인상,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면 꼭 필요한 것들이다.

그런데 두 병원 사측은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아닌데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사측은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는 단칼에 거절하고선, 서울대 병원의 의사들에게만 706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인상했다. 지난해 서울대 병원 직원 8000여 명의 임금 상승 총액은 고작 70억 원에 불과했는데 말이다.

공공부문 긴축을 앞세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를 외면하는 정부와 병원 측에 맞서는 서울대·경북대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 부산지하철 노동자들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은 직무성과급제 도입 반대, 임금 인상, 구조조정 계획 폐기·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들에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하고, 부산교통공사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위한 직무 분석을 추진하려 한다.

직무성과급제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억제해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하향 평준화한다. 또한 직무성과급제는 직무 평가를 미끼로 관리자의 현장 통제력을 강화하고,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부추겨 사용자가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기 쉽게 만든다.

그리고 부산교통공사는 올해 임금을 동결(실질임금 삭감)하려 해, 노동자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 높은 물가 인상을 고려하면 동결은커녕 임금이 대폭 올라야 한다.

부산시는 6월에 택시 요금을 대폭 인상한 데 이어 10월 6일에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도 인상한다. 고물가로 고통받는 노동자 등 서민층을 더욱 옥죄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산지하철노조는 임금 5.1퍼센트 인상 요구와 함께 도시철도 요금 인

상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중의 삶을 방어하기 위한 요구다.

부산교통공사는 “경영효율화”를 내세워 구조조정(인력 감축)도 추진하려 한다.

그러나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은 인력이 부족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인력 부족은 공공기관 노동자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중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동의 부산지하철노조 신평역무지회장은 “역무 효율화가 아니라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직원 한 명이 죽어나가야 대책을 마련할 거냐”며 사측을 질타했다.

노조는 신규 총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추진하는 직무성과급제 도입, 실질임금 삭감, 인력 감축 등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 시도의 일환이다.

그런데 생계비 위기에 대한 대중의 불만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벌어진 교사들의 투쟁은 노동자들의 반격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조건 후퇴와 공공서비스 질 하락, 안전 위협에 맞선 정당한 싸움이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기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solidarity.org/what-we-stand-for

온라인 토론회

독일 혁명 100년 기념

잊혀진 혁명

독일 1918~1923년

1회 지금 시청 가능 제국을 무너뜨린 혁명과 구세력의 반동

2회 10월 25일(수) 오후 8시 1923년 독일공산당 결정적 기회를 놓치다

참가신청 bit.ly/1004-1011-meeting NEW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